



## 소비세율 인상법안 통과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소비세 증세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이 지난 10일 상원의원 본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음.

- 이번 법안은 소비세율을 현행 5%에서 2014년 4월 8%, 2015년 10월 10%로 각각 인상하는 법안으로, 이는 1997년 3%에서 현행 5%로 올라간 후 15년 만임.
  - 이로써 노다 요시히코(野田佳彦) 총리는 국내총생산(GDP) 대비 240%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일본 경제가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함.
  - 또한, 일본 정부는 매년 1조 엔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재원을 마련하여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함.
- 본 표결은 상원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.
  - 한편, 노다 총리는 야당의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실시 합의를 전제로 추진했던 핵심과제인 만큼 성공적인 마무리와 동시에 당내 반발 세력으로 정치적 기반이 위태롭게 된 상황임.

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(Moody's)는 이번 일본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대해 '일본 국가신용도에 긍정적'이라는 평가임.

- 무디스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정부의 부채 삭감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책 중 하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일본 국채에 대해서는 시장의 강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.
  - 다만, 재정수지가 2020년까지 흑자전환 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전이 없을 경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.
- 반면,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S&P는 소비세율 인상 법안 통과에 대해 재정 건전화에 플러스 요인 이기는 하나 재정악화 속도를 약화시키는 정도라고 제한적인 평가를 보이기도 함.

- S&P는 지난 2월 일본이 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으로 정부 채무를 줄이지 못하면 현재 'AA-'인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.

(산케이 외, 8/10)